여야 '이종섭 불출석·원희룡 정치중립 위반' 난타전

〈국방장관〉

예결위, 야 "이 장관 독립지사 흉상 이전 등 현안 피하려 출국" 비판
국토위, 원희룡 "與 총선승리 돕겠다" 발언 공방…상임위 곳곳 충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각종 국회 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진행됐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만을 주고받았다.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원 장관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홍범도 흉상 이전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답을 피하고자 고의로 출석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 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독립지사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로 광복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훼손한 분이 이 장관"이라며 "당당하다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이 장관이 공무를 위해 폴란드 출장을 떠난 만큼, 이 같은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의 결석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폴란드의 경우 방산 수출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국익을 위해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내달 초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앞둔 사전점검 출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지난번(7월) 대통령 폴란드 방문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도망'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장관런'이라고 조롱을 섞어 말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원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성향의 포럼 강연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원 장관이 정치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결산 보고 관련된 질문에 답할 위치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질의를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설전은 잦아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30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도부, 전남서 수산업 핵폐수 피해 대책 논의

전남도당서 현장 최고위…어민 간담회·오염수 규탄집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전남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전남도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 박광온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장경태·송갑석·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및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에서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김승남·김원이·윤재갑·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전국 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열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방조하는 정부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면서 "피해대책 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고 앞으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은 대한민국 수산물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싸워야 할 대상인 일본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윤석열 정부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였다"면서 "국민의 인내는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폭거에 국민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오염수 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 수산인 대표 및 소상공인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부는 이후 목포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만금 예산 75% 삭감…국고 확보 비상

민주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강력 비판…사업 수정 불가피

정부가 내년도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문제를 두고 여권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 차원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새만금은 죄가 없다"며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 탓, 새만금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 복귀시키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나 삭감되면서 5147억 원이 줄어든 1479억 원만 남았다.

당장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됐고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부 개발 예산도 4분의 1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공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갖추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도 최근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문제로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어 국회 차원의 내년 예산 증액이 난항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내년도 국고 예산은 전년 대비 3%(971억 여원) 정도 감소, 국회 차원의 증액이 필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이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을 문제 삼아 광주시 현안 사업 예산 증액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열린 예결위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정율성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문제 삼았다"며 "자칫 이념 공방에 휩싸여 광주시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